

뒤로 밀린 공공의대·지역의사제... “지역·필수의료 유입 어떻게?”

정부, 2025학년도는 기존 의대만 증원기로 의대 유치 기대했던 전남·창원 결집 분위기 여론 77% 공공의대 찬성 “같이 도입해야”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을 추진하며 현재 고2가 대학에 진학하는 2025학년도에는 의대 신설 없이 기존 의대 정원만 늘리기로 하면서 공공의대, 지역의사제 도입 논의는 뒤로 밀리게 됐다.

전남, 경남 창원 등 의대 신설을 요구해왔던 지역은 의대 신설 목소리를 더 높이는 가운데, 늘어난 의대 정원이 필수의료로 유입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에 공공의대와 지역 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 가능성을 배제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 의료정책실장은 지난 21일 의대 증원 수요조사 결과 브리핑 당시 공공의대, 지역의사제 추진 의사를 묻는 질문에 “2025년에 학생을 받으려면 급방 준비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며 “공공의대와 지역 의대 신설은 앞으로 수요를 봐가면서 계속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지역의사제는 2025년이 아닌 다른 수요를 반영해야 할 때 같이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 유치 기대가 컸던 전남과 경남 창원 지역은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 결집하는 분위기다. 광주광역시도 전남도 내에는 의대가 없어 이번 의대 증원 수요조사에 의견을 내지 못했다. 경남도의 경우 진주에 국립경상대가 있지만 창원의 경우 인구 수에 비해 의사가 적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전국 평균 2.18명이지만 경남은 1.74명 수준이다.

전남도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내년 1월 초 확정하는 의대 정원 확정안에 지역 의대 신설 방침과 신설 정원 배정을 반드시 반영해 주길 바란다”며 “지역 내 공공의료 사명감 역할과 필수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인프라 확보 차원에서 전남에 반드시 국립의대가 설립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남도의회는 전남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 지역 의대 신설과 경상국립대 의대 정원 200명 이상 확대를 요구했다.

2006년 이후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동결된 상태다. 정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약 2주 간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2025-2030학년도까지 얼마나 증원 여력이 있는지 수요를 취합한 바 있다.

현원 대비 연도별 증원 수요를 살펴보면 ▲2025학년도 최소 2151명·최대 2847명 ▲2026학년도 최소 2288명·최대 3057명 ▲2027학년도 최소 2449명·최대 3696명 ▲2028학년도 최소 2649명·최대 3696명 ▲2029학년도 최소 2719명·최대 2882명 ▲2030년 최소 2738명·최대 3953명이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 의료정책실장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복지부는 다음달까지 의학교육현장점검반을 통해 권역별 간담회와 현장실사 등을 통해 실제 증원 여력을 파악한 후 배분 기준을 정립해나갈 방침이다. 최종 증원 규모는 다음달 말, 늦어도 내년 1월 초까지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의대 증원의 취지가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는 것인 만큼 복지부는 지방국립대, 정원이 50명 미만으로 적은 ‘미니 의대’ 정원 확대에 방침을 찍고 있지만 수도권 사립 의대의 증원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사립대라고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발언한 바 있다.

시민사회에서는 의대 증원을 통해 늘어난 의사들이 지역·필수의료 분야에 대폭 유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공의대, 지역의사제 등 보다 명확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공의대는 지역·공공의료에 복무할 의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졸업 후 지역 복무를 의무화하는 것을 전제로 인재를 선발하는 체계다. 지역의사제 역시 비수도권 지역 인재가 해당 지역 의대에 입학하면 졸업 후 해당 지역 의료에 종사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 의대와 지역의사제를 반드시 함께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보건의료노조가 실시한 대국민 여론조사에서는 국립대가 없는 지역의 공공의대 및 특수목적 의대 신설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 77.7%, 지역의사제 도입 필요성에 83.3%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정부는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해 의사를 양성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어디에 얼마만큼 배치를 하겠다는지는 없다”면서 “그냥 (인력만) 확대하면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 피부과·성형외과 등 고수의 진료과 쏠림을 막을 수 없다. 반드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공공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도입 패키지가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공공의사제와 지역의사제 모두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신중히 검토 중이다.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분야의 수가 확대, 의사의 정주·근무여건 개선 등 ‘정책 패키지’를 마련해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뉴시스

“의대 정원 4천명 늘리면 준비생 1만명 ↑ ...2등급 이과생도 가능”

올해 의대 준비생 약 1만명...종로학원 “1천명 증원시 1.2만명 ↑”

‘지방→수도권→서울권→의대’ 연쇄 이동...지방대 모집난 우려

전국 의과대학 모집 정원이 대학들 희망대로 약 4000명 늘어날 경우 의대 준비생은 지금보다 약 2배 많아질 것이라던 입시기관 전망이 나왔다.

종로학원은 의대 모집 정원이 4000명 증가하면 의대 준비생은 올해 9532명에서 2만2175명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올해 의대 준비생 수는 전국 39개 의대 수시 지원자 수(5만7192명)를 바탕으로 추정할 수 있다. 수시 지원 횟수가 6회로 제한되는 점을 감안하면 의대 준비생 수는 9532명(6/5만7192명)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는 수시 지원자를 기준으로 한 추정치이고, N수생과 반수생 등 정시 지원자까지 합하면 실제 의대 준비생 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학원은 지난 10년 간 의대 경쟁률이 30대 1 안팎인 점을 고려했을 때 의대 정원 1000명 증가 시 준비생은 1만2694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정원이 늘어나도 경쟁률은 소폭 증가하거나 지금과 비슷하게 유지된다는 점을 전제했다. 재작년 약대 37곳이 학부로 전환하면서 모집인원이 1743명 늘었지만 당시 의대 수시 전국 경쟁률(36.29대1)이 전년(32.92대1)보다 소폭 증가에 그친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이어 의대 정원이 3000명 증가하면 1만9013명으로, 4000명 증가하면 2만2175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학원은 전망했다. 이렇게 되면 2등급 이과생도 의대를 준비할 수 있다는 게 학원의 예상이다. 2만2175명은 올해 수능 과학탐구 영역 점수자(23만2966명)의 약 10%에 맞먹는 규모다.

의대 준비생이 지금보다 2배 증가할 경우 지방대 위기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 상위권 대학 준비생들이 의대로, 수도권 대학 준비생들은 서울권으로, 지방대 준비생들은 수도권으로 연쇄 이동하면서 지방대가 모집

난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 입시 전문가는 “의대 정원이 확대되면 모집난을 겪는 지방대들은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며 “의대 정원 확대가 문과생과 지방대의 고갈로 귀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 | |
|---|---|
| 호남신문 i-honam.com |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서구운천로213스카이랜드 309호 |
| 발행인·편집인 김순열 편집국장 서선옥 | |
|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유동3길 26 서주빌딩 101호 (061) 905-2011 | |
|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 |
|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mpn | |
|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들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